

기획 특집 VI

시급한 과학기술 풍토 조성

李 光 榮

〈한국일보기획위원/과학평론가〉



先進진입 과학문맹 탈피관전 과학정신 정치적수용 급선무

창의적 합리성에 바탕

과학기술풍토 조성의 중요성을 이야기 해 온 지 오래다. 그러나 진정 과학기술풍토 조성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과학기술풍토 조성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과학기술처는 이 일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학기술발전은 (1) 창의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국민의 과학탐구의 정신 (2) 국민복지를 위한 윤리성에 근거한 기술개발 그리고 이의 실천적 수단으로서 국민합의과정을 통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 일반 국민은 과학기술이 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학기술의 편익보다는 자기중심적인 부작용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편익보다 부작용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과학기술의 발전정책에 국민협조의 획득이 곤란하고 이는 국가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앞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는 정부의

가치 지향적인 과학기술발전 목표 수립과 함께 이를 위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사회 전반에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과학기술정책의 적극적 공개행정과 과학기술에 대한 올바른 정보, 지식의 적극적 제공 및 과학기술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체계적 기반조성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동안 청소년 과학화 활동사업을 위주로 추진되어 오던 국민 과학화 사업은 1991년도부터 사회지도층인사를 비롯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이해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과학기술국민이해사업은 기본목표를 급변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1) 과학기술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응능력과 합리적인 과학정신의 함양과 (2)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참여와 지지로 기술혁신의 저변확대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과학기술풍토 조성사업은 국민의 의식과 지적인 수준은 물론 시대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의식과 지적 수준 그리고 시대의 요구에 따라 과학기술풍토 조성 사업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대따라 사업내용 달라야

이런 면에서 그간 우리나라 과학기술풍토 조성사업의 변천사를 돌이켜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풍토 조성사업의 흐름은 그동안 시대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모해왔다.

17세기 서양과학기술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자 그 내용은 그대로 조선시대 우리선조들의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다. 과학기술분야에 아무도 종사하거나 연구하지 않고 그저 즐기고 감상했다. 이익(李瀾), 홍대용(洪大容), 박제가(朴齊家), 정약용(丁若鏞), 이규경(李圭景), 최한기(崔漢綺) 등 많은 학자들이 서양과학의 단편들을 보고 즐겼으나 19세기 중반까지 이들이 습득한 지식을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 상당히 많은 과학기술 서적이 출판되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漢城旬報 과학보도 큰 비중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 서적이 대중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부터다. 1884년 최초의 신문으로 창간된 한성순보(漢城旬報)는 첫호부터 계속해서 서양의 과학자와 기술을 소개하는데 상당한 지면을 할애했다. 지구와 우주의 모양이나 전기, 철도, 전신 등 모든 서양의 과학기술이 당시로서는 대중에게 무척 신기하면서도 참신한 뉴스거리였다. 신문뿐 아니라 당시에 나온 책들도 주로 서양의 과학기술을 소개하는데 많은 힘을 쏟았다. 1905년을 전후해서 활발하게 벌어졌던 애국계몽운동은 과학기술의 보급이 중요한 과제임을 한결같이 강조했다. 많은 애국계몽단체가 발행한 간행물도 같은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초기 과학화운동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근대과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청소년들이 과학기술 계통의 공부를 하기 위해 일본유학을 떠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과학대중화운동의 다음 단계는 1930년대초에 몇년 동안 진행되었던 「과학데이」행사를 꼽을 수 있다. 당시의 과학대중화운동은 발명학회가 1933년 과학조선(科學朝鮮)이라는 월간 과학지를 창간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학회가 중심이 되어 1934년 2월 제1회 「과학데이」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그해 4월 과학주간행사를 폈다. 「전사회적으로 자연과학 지식열을 고취함양함」을 목적으로 실시된 이 행사에는 그야말로 전국적인 지원이 있었다. 이 운동엔 윤치호(尹致昊), 김활란(金活

蘭), 현상윤(玄相允), 송진우(宋鎭禹), 방응모(方應謨), 김성수(金性洙), 최규동(崔奎東), 유광열(柳光烈) 등 당시의 문인과 언론인 법조인 교육자 등 많은 사회 저명인사가 참가했다. 이들은 진화론 주장자 찰스다윈의 기일인 4월19일을 「과학데이」로 정하고 그 전후를 과학주간으로 설정하여 과학의 대중화를 꾀했다.

거국적 「과학주간」행사 펼쳐

1934년과 35년의 과학주간행사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는데 당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비롯한 신문들은 사실과 함께 기사를 크게 다루어 과학운동을 격려했다. 서울시내의 자동차가 총 동원되어 경적을 울리며 시내행진을 했고 방송과 과학영화상연 강연회 등 행사를 벌였다. 또 이것이 모체가 되어 1934년 여름 과학지식보급회가 조직됐다. 구한말기의 대중과학운동이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한 것이었다면 1930년대의 과학대중화운동은 각계 각층이 망라한 대중운동이었다.

과학대중화운동이 다시 불을 당긴 것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만들면서 과학대중화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였다. 당시 경제기획원안에 신설된 기술관리국이 경제개발계획을 보완하기 위한 제1차 과학기술진흥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계획을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과 교양의 수준이 낮고 기업가의 기술혁신 또는 부단한 기술훈련으로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의욕이 저조하여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진흥을 꾀할만한 기초가 빈약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처가 1967년 4월21일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을 모체로 독립되

면서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위한 제2차 과학기술진흥5개년계획의 기본목표의 하나로 「과학적인 풍토를 조성하여 사회생활과 사고방식의 과학화를 기한다」고 설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풍토조성사업은 60년대후반에 이르기까지 내세울 것이 없었다. 정부가 과학화운동에 적극 발벗고 나선 것은 72년이후부터였다. 정부가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두차례 추진하면서 과학대중화사업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 것이다.

마침내 1973년 朴正熙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민의 과학화운동」을 제창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전국민의 과학화운동은 첫째 모든 국민의 사고와 생활습성을 과학화하고 과학기술을 존중하며 과학지식을 일상생활에 활용할 줄 아는 과학적 생활풍토의 조성, 둘째 국민각자가 한가지 기술이나 기능을 익혀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과 기능습득의 촉진, 셋째 산업기술의 전략적 개발 등 3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당시 과학기술처를 비롯한 경제기획원 내무부 법무부 문교부 국방부 상공부 교통부 농수산부 건설부 체신부 보사부 문공부 총무처 원호처 노동청 등 거의 모든 정부기구가 망라되어 이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처를 제외한 여타부처가 전국민 과학화운동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종래 다루어오던 과학기술관련 업무를 보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과학화운동이 지지부진하자 1979년 朴正熙대통령은 연두순시를 통해 전국민과학화운동의 활성화를 강조하기에 이르렀으나 10.26사태로 해서 정부

의 범부처적인 과학화운동은 그후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10.26사태후 열의 식어

요즘 정부(과학기술처)와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관련단체가 과학기술풍토조성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도 과학기술 지식의 확산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대과학사를 돌아켜 볼 때 한국의 과학기술은 전혀 대중적 기반을 형성하지 못한 채 발달해왔다. 과학을 대중에게 보급하고 과학기술을 발달시켜 보려던 노력은 1백년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는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최근 30년여간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그 자체는 큰 발전을 했다. 하지만 이는 순전히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

우리의 과학대중화운동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아직 불을 붙이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의 문화 속에 뿌리 박고 있는 유교적 전통이다. 우리는 유교적 전통 덕분으로 유달리 학문을 숭상했지만 우리가 존중한 것은 인문과 사회학이었지 자연과학이 아니었다.

그래서 학문을 하는 것은 과거시험을 치러 합격함으로써 지배계급이 되겠다는데서 출발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상도 이에서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을 1백년 전이나 똑같이 잘 살게하는 도구로만 생각해왔다. 1880년대를 거쳐 1910년 나라가 망할 때까지 선조들은 과학기술을 나라와 민족을 잘 살게 만들어 줄 수단으로만 여겨왔다.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온 수단을 이용하여 우리의 살길을 찾으려했다. 이것이 곧 당시의

구호 동도서기(東道西器)였다.

동도서기적인 태도는 1960년대를 거쳐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과학기술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였지 과학기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1970년대 과학기술은 수출드라이브를 뒷받침하기 위해 계획이 마련됐고 1980년대는 기술입국을 표방하고 있지만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를 되살리자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첨단산업에 국가가 크게 힘을 쏟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런 태도가 낳은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기술주의이다. 말로는 과학기술이라하지만 과학은 없어지고 기술 그것도 도구로써의 기술을 생각하고 있다. 이같은 풍토속에서 과학기술이 정상적인 발전을 하리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때묻지 않은 호기심 조장

어린이가 과학에 흥미를 갖게 되는 것은 때묻지 않은 호기심 때문이다. 이런 어린이들에게 과학기술이 돈벌이에 좋으니 하라고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창의적인 교육이 될 수 없고 한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인재들 기를 수 없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자체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과학과 기술은 본시 다른 뜻을 지니고 있었다. 과학과 기술에 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과학은 자연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고 기술은 인간의 물질적 편이를 위한 고안이다. 과학이 자연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 추상적인 논리체계라면 기술은 그것에 대한 경험적인 것, 구체적

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과학과 기술은 원천적으로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도 일부 학자들은 「과학기술」로 이어 표기하는데 대해 잘못된 것이란 의견을 보이고 있다.

과학과 기술의 결합 19C에

과학기술은 당연히 「과학」과 「기술」로 따로 떼어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학과 기술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렇다 할 상호작용 없이 각각 발전되어 왔다. 과학과 기술의 결합은 18세기말에서 19세기 중반에 걸쳐 「기술의 과학화」, 「과학의 기술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의 결합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이다. 19세기 과학혁명은 기술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가져오게 했다. 특히 이 시기에 자연과학분야에서 이룩한 획기적인 발전은 전기와 철강, 석탄, 내연기관 등의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다. 또 이렇게 해서 발전한 과학과 기술은 자본축적 수단으로 점목됨으로써 과학과 기술은 하나로 결합되는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제1, 2차 세계대전은 과학과 기술을 하나로 묶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가 과학과 기술을 총동원하게 된 것이다. 가공할 화학병기인 독가스(1915년:독일)개발에서 레이더(1939년:영국)와 원자탄(1945년:미국)개발이 좋은 예이다.

과학과 기술이 국가에 의해 동원체제를 갖춰감에 따라 과학과 기술은 밀착되어갔다. 과학이론은 곧바로 응용되어 기술발달을 불러왔고 기술상의 문제들은 과학의 주제를 제공하기

에 이르렀다. 과학과 기술은 유리된 상태가 아니라 유기적인 상태에서 발달을 상호보완, 자극함으로써 상승효과를 나타내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속화시켰다. 그 결과 「과학」과 「기술」은 자연스럽게 단순히 「과학기술」로 표기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오늘에 이르러서는 과학과 기술의 경계선을 학문적으로도 분명히 구기가 무척 어렵게 됐다.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곧바로 기술로 이어지고 기술적인 문제가 새로운 과학적인 연구의 영역을 넓혀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첨단과학, 특히 유전공학과 전자공학분야가 좋은 예이다.

과학기술의 힘 날로 증대

최근 과학기술이 경제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류가 지상에서 크게 번성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만년전쯤 농사법을 알아낸 후부터이다. 인류는 한 굉장한 천재가 농사법을 알아내 이것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지상에서 크게 번성하기 시작했다. 오늘 인구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와 있지만 이는 농사법이 널리 보급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18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기술의 위력은 더욱 증대됐다. 기술선진국인 서구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 기술을 늦게 받아들여 먼저 받아들인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된 36년간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이같은 아픔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형이상학에 젖어있던 동양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안고 있는 슬픈 역사이기도 했다.

과학기술지배시대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과학기술 선진국이 세계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 선진국

이 세계경제를 쥐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산물인 첨단병기로 무장한 나라들이 국제정치에서 많이 기득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국가주의가 이데올로기로 대체해서 강력히 대두되고 있어 해가 거듭될수록 더해 갈 전망이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 나라안으로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과거 정통성이 결여된 권위주의 체제 속에서 저질러진 총체적인 불법과 부조리 즉 부정부패문제를 척결하기 위해 정치와 사회는 물론 경제마저 거둬나기 위한 몸살을 앓고 있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고통분담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다 남북통일문제를 대비해야 하는 등 일이 산적해 있다.

나라밖으로는 신국제질서개편 속에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의 전환으로 기술패권주의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환경문제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선진강대국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등장했다. 또한 시대적으로는 공업화사회에서 탈공업화사회 다시 말해서 정보화사회의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

先·後進만 남는 兩極化 가속

정보화사회의 진입은 이제까지 선진과 개발도상, 후진국 등 세가지 구분으로 하던 국가수준을 가속성장과 저속성장국으로 나뉘어 증진은 없어지고 선진과 후진만이 남는 양극화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 패권주의가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며 이로 해서 세계적인 갈등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나라의 위상은 시대적 격변기에 크게 바뀌어 왔다. 17

세기 산업혁명은 서양 여러 나라가 동양 여러 나라를 앞지르는 계기가 되었다. 정보화사회의 이행은 이를 잘 받아들여 소화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부침을 다시 한번 가져올 것이다.

과학기술발전의 특성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과학탐구이고, 둘째는 기술개발이며, 셋째는 과학기술에 관한 정책결정이다.

기술은 탐구서 얻은 결과

과학탐구는 창조성과 합리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과학탐구는 문제를 이성으로 추구해 해결하려는 정신이다.

기술개발은 과학탐구에서 얻어진 결과의 응용부분이다. 그러나 기술개발은 그 자체가 특성을 갖고있지 않으면 안된다. 기술은 응용방법에 따라 인류복지와 문명의 파괴라고 하는 상반된 결과를 빚는다. 과학기술 전반이 종종 비판받는 것은 사회 윤리성을 저버린 기술개발에 원인이 있다. 사회의 윤리성을 바탕으로 한 기술개발은 곧 복지외 정의가 담긴 국가지향성을 갖게 된다.

과학기술의 정책결정은 나름의 독자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국민합의성이 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정책결정은 일부 소수집단의 이해관계에 집착될 가능성이 많다. 국민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은 민주적인 여론에 기반을 둔 국가로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도 그 나름의 바람직한 특성 확보와 유지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천년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후진국으로

치질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손에 달려 있다.

17세기 산업혁명은 일반대중이 글의 문맹에서 깨어나 새로운 과학지식과 기술이 널리 보급됨으로써 급격한 발전을 보게 되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만큼 빨리 진전되어 왔다. 그래서 일반대중이 글의 문맹에서 빨리 깨어난 유럽 여러 나라가 그동안 세계를 이끌어 왔다.

제3의 물결로 일컬어지는 정보화사회는 과학기술 문맹으로부터 깨어난 국민과 국가가 주도해갈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파급효과를 날이 갈수록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다.

정보화사회 대비해야

다행스러운 것은 다가올 정보화사회는 천연자원이 아니라 사람이 국가발전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은 빈약해도 우수한 인력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회는 우수인력을 어떻게 미래사회에 대비해서 인재를 길러내느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

정보화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한마디로 능률과 효율을 필요로 하는 신용사회이다. 우리가 2000년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한다면 당연히 다가올 사회에 알맞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이 오래전부터 어린이 교육에 정직성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미래 사회를 대비한 것이다. 우리는 112번호가 장난전화로 해서 시달림을 받고 있을 정도로 국민의식면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국민의식으로는 2000년대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

현 정부의 정책은 2000년대 선진국

진입을 단순한 하드웨어적인 과학기술혁신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과학기술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고 이로 해서 국민의 소득이 선진국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과학기술을 경제사회발전의 단순한 도구로 이용하자는 발상이다.

그러나 이는 착각이다. 과학기술혁신은 국가의 의지나 기업인의 투자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과학기술을 단순히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만 생각해 온 데서 비롯된 것이 많다.

오늘 우리의 과학기술정책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런 면에서 출발하고 있다. 오늘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부정부패 등 많은 문제도 과학기술의 결실만을 중시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과학기술의 본질을 우리의 의식, 우리의 문화 속에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2000년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가 없다.

실패한 中國의 中體西用

우리는 중국과 일본의 개화기 역사 속에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은 거의 같은 시기에 서양의 과학기술을 접했지만 중국은 실패했고 일본은 성공을 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일본은 서구의 과학기술을 도구로만 보지 않고 이를 문화적으로 수용했다. 과학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제도까지 바꾸었다. 그러나 중국은 자존심 때문에 중체서용(中體西用)을 고수하다 실패했다. 중국의 풍속과 제도 사상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라는 중화(中華)사상을 바탕에 깔고 그 위에 서양의 대포와 군함만을

수입해 오자는 생각이 중국을 망쳤다. 중국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서양의 무기를 수입한다는 생각은 그럴 듯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꿈이었다. 중국은 과학기술을 도구로만 보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과학기술을 문화적 차원에서 승화하지 못하고 도구로서 이용만 하려는데서 문제가 심각한 사태로 발전한 것이다.

과학기술혁신을 외치고 있으면서 과학기술인들이 전문가 집단으로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결정과정에 참여할 길을 열어놓지 않았다. 과학기술의 문화적 수용은 커녕 최소한의 제도마저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과학기술인이 연구를 위해서 경제자료를 찾아 로비를 해야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오늘 우리의 경제가 정치논리에 밀리고 있듯이 우리의 과학기술이 정치와 경제논리에 희생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신한국은 정직한 사회, 일한 만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사회를 표방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에 앞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종합했다. 그래서 부정부패 척결과 침체된 경제의 회복에서 남북통일의 중요성을 도출했고 이에 대한 방안들이 짜여졌다.

지금 큰 파장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 작업도 이런 작업의 일환이라 생각된다. 문제는 지금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부정부패 문제가 처단만으로 깨끗이 소멸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부정부패의 문제는 결연한 처단으로 현상을 도려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병소의 고름을 짜내는 일은 될 수 있을 지언정 이를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부패 싹은 합리성 결여에서

그렇다면 국민의 의식을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 우리의 선비사상 등 전통적인 사상으로 가능할까. 물론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문제는 무엇으로 국민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다.

부정과 부패는 어디로부터 싹 텄을까.

한마디로 문제를 이성으로 풀어가는 합리성이 결여된 데서 비롯됐다. 따지

고 보면 과학정신의 부재가 원인이 된 것이다. 더욱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정보화사회는 합리성과 능률성 그리고 정직성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이룩될 수 없다. 이는 바로 과학정신을 우리생활 속에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하다. 과학의 생활화는 2000년대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도 꼭 이룩해야 한다.

따라서 신한국 건설을 위해 정치권이 과학대중화운동을 국가정책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 동시에 과학기술처가 이를 위해 정책개발을 해야 한다.

과학대중화운동이 정치적 차원에서 수

용이 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당위성은 물론 뚜렷한 논리적 근거와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보다 뚜렷하게 제시해 줄 것이고 나아가 2000년대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의 제도와 방법에서 경제와 정치가 어떤 구도로 바뀌어야 할지도 분명히 제시해 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과학기술 풍토조성사업은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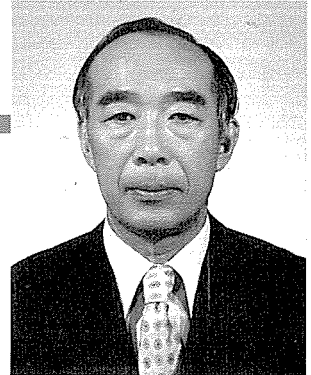
과학기술풍토조성사업의 성패가 곧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에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인의 권익신장

李 殷 雄

(서울대 명예교수)



과학기술존중사회이룩해야 「과학시상통폐합」 어불성설

전국민과학소양 앙양을

한 나라의 과학기술풍토조성과 과학연구진작은 과학문화창달의 필수 요건이다.

또한 과학문화를 갖추지 못한 선진국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 경제가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선진국 대열에의 진입을 위해서는 아직도 크게 미흡함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2천년대 초 우리

나라가 변영된 나라로서 선진국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의 선진화가 급선무의 과제라고 많은 식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선진화는 기초과학 및 첨단과학기술의 균형있는 연구개발과 아울러 과학의 대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같은 생각에서 제창되고 있다.

과학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풍토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과학기술풍토는 과학자

나 기술인의 연구활동과 관련이 깊지만 이에 못지않게 전국민의 과학소양에 있어서 그들의 모든 생활영역에 과학기술이 침투되어 과학지식과 방법이 적절히 활용되고 건전한 과학정신이 발휘되는 동시에 과학자의 연구활동을 이해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슬기가 중요하다. 또한 과학자들은 연구활동을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나라의 과학기술풍토조성에 공헌해야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